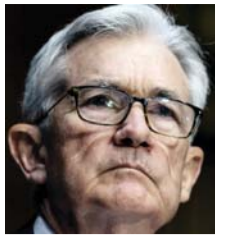


코스피	2563.48	코스닥	727.70
	(-12.68)		(-7.22)
금리 (미국 9년)	2.565	환율 (원/달러)	1449.50
	(-0.029)		(+7.10)



## 경영권 흔드는 상법 개정안... 행동주의 공세 거세진다

### 주총 앞둔 기업들 '좌불안석'

# 최근 중견기업 A사에서는 국회 통과를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주요 임원들이 모였다.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까 걱정이다", "인건비 부담에 가뜰이나 힘든데 '소송'까지 대비해야 하느냐" 등등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경우, 이사회가 분할·합병이나 신사업 진출 등 주요 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펀드들이 사사건건 소송을 걸 공산이 크다. 회의는 한 시간도 안 돼 끝났다. 일주일 후 다시 모였지만 역시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3차 회의 날짜를 또 잡았다. 한 임원은 "정치권이 이 정도면 기업보고 한국을 떠나란 얘기 아니냐"면서 "다시 모여도 해법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 KT&G·영풍부터 코웨이까지 강해지는 주주 행동주의 압박

### 국회 문턱 앞둔 상법 개정안에 방어수단 없는 중견기업 비상

3월 정기주주총회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사업 못 해 먹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행동주의 탈을 쓴 투기 자본의 창이 많아지고, 날카로워지고 있어서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업은 경영권까지 걱정해야 한다.

### ◆주총 앞두고 목소리 내는 '행동주의'

9일 재계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방경만 KT&G 사장 취임 후 1년간 KT&G의 경영 성과에 대해 낙제점에 해당하는 'F' 평가를 내린 서한을 회사 측에 발송했다. FCP는 "미래 먹거리인 권련형 전자 담배(HNB) 해외 판권을 경쟁사에 감감이로 넘긴 것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권련담배에 1조원 투자를 집행한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난 1년간 주가가 70% 오른 필립모리스를 벤치마킹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KT&G는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와 코웨이측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총 의결권 대리인을 통상 인원보다 많은 2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코웨이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주총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 지분 3% 이



첫GPT로 생성한 행동주의 펀드 이미지.

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한편 주주 친화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영풍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고 주시 액면분할을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언로킹 밸류(Unlocking Value)'라는 명칭의 소액주주가 농심의 낮은 수익성과 주가 부진을 지적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내부일감 몰아주기, 성과와 무관한 경영진 보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배구조 이슈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떨어진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주총 기간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서다. IBK투자증권은 향후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파마리서치, 동진씨미켈, 동원F&B, 휴메디스 등을 꼽았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얼라인 공개 캠페인 진행에 따라 유사 조건 기업에 동일한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 ◆상법개정안, 경영권 흔든다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더 많은 공격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영권 방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지난해 87사 315건으로 전년 93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9곳(68%), 중견기업이 22곳(25%)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6곳(7%)에 불과했다. 중소·중견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35%에 불과하지만, 경영권 분쟁 발생 기업 중에선 93%를 차지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잇따르는데 기업들은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불황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세계 식량가격 상승에 먹거리값 도미노 인상

2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 1.6% 올라 설탕·유제품·유지류 상승 두드러져 신라면·비비고만두·스팸 인상 행렬

원자재값 상승과 고회율, 여기에 세계 식량 가격까지 오르면서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연이어 인상되고 있다. 빵, 초콜릿, 과자뿐만 아니라 냉동만두,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과 라면, 스낵류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127.1로 전달보다 1.6% 상승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속 하락한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3% 오른 수치다.

특히 설탕과 유제품, 유지류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설탕 가격지수는 공급 부족 우려로 6.6% 급등했으며, 유제품 가격지수도 4.0% 올라 148.7을 기록했다. 팜유, 유채유, 콩기름 등 유지류 가격지수 역시 2.0% 상승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 생산국의 계절적 생산량 감소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 곡물 가격도 오름세다. 곡물 가격지수는 0.7% 상승한 112.6을 기록했다. 특히 밀 가격은 러시아의 공급 부족



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신라면이 진열되어 있다.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 인상, 고회율 등으로 식품업계 원가 압박이 심화되면서 먹거리 가격의 줄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조정하고, 총 56개 라면과 스낵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 /뉴시스

과 기상 악화로 인해 상승했다.

글로벌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품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등 17개 브랜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이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만두 20여 개 제품의 가격을 5.16% 인상했다. 대표 제품인 왕고자는 8980원에서 9480원으로,

햄과 소시지 가격도 8.10% 올랐다.

스팸 클래식(200g)은 5580원에서 5980원으로, 백설 한입속 비엔나(90g)는 1980원에서 2180원으로 인상됐다. 동원F&B도 지난 1일부터 냉동만두 15종의 가격을 평균 5% 올렸다.

육가공품에 주로 쓰이는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가격이 3년간 21% 올랐고, 국내산 돼지고기는 1년 새 12.5%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부 만두 제품에 들어가는 수입산 오징어 가격도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헌재, '尹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가능성

통상적 변론 종료 후 2주 내 이뤄져 법조계·정치권 13일 또는 14일 예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초 선고기일을 지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절차 종료 후 2주 내에 이뤄졌으므로, 오는 13~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인용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헌재가 이같은 변수를 고려할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일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가 원칙이지만,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다. 둘 다 당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다.

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다. 이 때문에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13일(목요일)이나 14일(금요일)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윤 대통령, 석방 뒤 권성동 등과 통화... 권성동 "안부 주고받아"  
▲나경원 "검찰에尹 석방 지연 책임 물어야... 공수처 해체법 발의" /사진 뉴시스

▲'비서 성폭력 의혹' 장제원 "10년 지나 고소"... '피해자다움' 매몰 지적  
▲이재명 "검찰과 싸고" 발언에 비명계 반발 커져... "통합 행보 진심 못 믿어"

▲'개헌' 고리로 이재명 포위하는 與... "이 대표 한 분만 동참 안해"  
▲권성동 "대통령·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 일고의 가치 없어"